

##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과 대응 전략: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의 경험과 사회적 치유를 중심으로\*

유해정\*\*

본고는 재난참사의 사회적 치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2차 가해 중 하나인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대응을 다룬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공적 논쟁에 장에 진입했는데, 사회적 권력에 의해 일상적 유가족다움과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을 강요받았다. 일상적 유가족다움이 일정한 감정, 태도, 행동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무고함, 순수성,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은 익명화, 순응화, 고립화를 통해 이들의 정치 참여를 억압하며 삶의 자율성과 존엄을 훼손해왔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전략으로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을 거부하고, 일상적 유가족다움에는 △내면화를 통한 검열, 단속 △사회적 고립, 패싱, 커버링 △사회적 자원화 △저항과 해체 등으로 대응해왔다. 권력에 대한 통렬한 통찰과 함께 △희생된 자녀 △4·16가족협의회 △애도하는 시민들과의 만남은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은 물론이고 일상적 유가족다움에 저항하고 이를 해체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했다.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가족다움을 권력 작용의 산물로 접근하고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반이 될때 유가족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재건해 삶이 회복되는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이 열린다.

주제어: 세월호, 재난, 사회적 낙인, 유가족다움, 사회적 치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1046763)

\*\*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 스마트공동체사업단 학술연구교수

## 1. 들어가며

풍경 1. 2014년 여름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 위한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 40일차에 대면해야했던 것은 신상 털기와 중상모략이었다. 김 씨가 이혼을 했고,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며, 자녀를 1년에 한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으며 김 씨의 단식이 보상금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김 씨가 호남 출신이며,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며 정치 배후설, 노조 배후설을 제기했다. 보수 언론과 일부 누리꾼, 정치인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향부터 직업, 사생활, 취미, 언행 등을 캐고, ‘정상가족’, ‘중산층’, ‘교양 있는’ 아버지 기준에 맞춰 그를 재단하며 진정성과 유가족다움을 논했다. 김 씨의 페이스북에는 단식을 비아냥대는 음식 사진이 올라왔고, 일부는 ‘폭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자녀가 죽은 이유를 알려 달라며 곡기를 끊은 유가족에게 조롱과 혐오로 답한 것이다.

풍경 2. 2020년 4월, 이천물류창고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악성댓글에 시달려야했다. “노가다”, “작작하고 공부해라”는 등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댓글부터 “리본을 만들고 천막치시고 이번엔 10억 넘기겠지요” “땡 잡았내 축하한다”며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악플이 연이어 달렸다. 또한 유가족이 대통령의 관심표명을 요청하자 “울분의 대상을 찾아 생떼 부리는 아이들 같다” “대통령이 뭐 동네 이장도 아니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유가족이 쳐들었구나” 등 유가족이면 유가족답게 행동하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공격하기도 했다.<sup>1)</sup> 이례적으

---

1) 최진렬. “합의했더니 “돈방석 앉았다” 조롱... 삼중고 이천 화재사고 유가족”. 「신동아」. 2020년 7월호.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91805/1> (검색일 2020.11.8.)

로 정부가 먼저 나서 악성 댓글과 유가족 명예훼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만큼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도를 넘었다.

이 풍경들은 재난참사와 정치, 유가족다움과 혐오가 만나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가족다움이 중요한 사회학적 주제일 수밖에 없음을 환기한다. 사실 헤아려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유가족다움을 강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구분해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추궁해왔다. 330여명이 사망한 1970년 남영호 침몰 참사 당시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조방임 책임과 선체인양을 요구하며 파출소로 몰려가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진짜 유가족과 불순 유가족을 구분해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시신수습과 서울시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며 시청을 점거했던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시체 팔이'로 비하됐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때는 유가족들이 대구시의 대응에 분노,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하자 유가족 대표를 노조 간부 출신이라고 호도하며 정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례들은 지금-여기에서 발생하는 재난들에 여전히,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는 유가족다움이 '재난정치'<sup>2)</sup>와 함께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요한 갈통(2000)의 폭력이론은 재난정치에도 유의미한 관점을 제공하는데, 이를 적용해보면 재난과 그에 따른 폭력과 피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축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재난에 따른 직접적 위해다. 이는 사망, 실종, 부상, 피난, 재산 손실 등 재난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 도미노처럼 신체적·정신적 질병, 트라우마, 실직, 빈곤, 돌봄·보육·교육 공백, 가족 관계 훼손, 사회생활 곤란 등을

2) 재난정치란 재난이후 다양한 행위주체가 재난을 인식, 수용하고, 진실공방, 책임분배 및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경합을 벌이는 정치의 장을 의미한다(유혜정 2018, 6).

야기한다. 둘째, 구조적 폭력과 피해다. 시혜적 재난 피해 지원,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사찰, ‘사고-보상’ 프레임, 고통의 의료화, 알권리의 훼손, 관대한 처벌 또는 불처벌, 진상규명의 좌절 등으로 이는 구조와 제도,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로 발생한다. 셋째, 문화적 폭력과 피해다. 유가족다움, 피해자 비난, 책임 부인, 편파·왜곡·선정 보도 등이 대표적인데 이는 재난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해 주는 이데올로기와 사상, 예를 들면 생명경시풍조, 물질만능주의, 위험의 타자화, 공감격차 등에 터 잡고 있다. 재난 위해가 공시적인 성격을 띠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통시적인 양상을 띤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고-보상의 재난정치와 책임을 부인, 방관하는 사회가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키며, 재난 이후를 더욱 큰 재난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고 쉽게 의제화 되는데 반해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특히 문화적 폭력은 피해자들의 인식과 행동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직접적 피해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문화적인 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행동과 저항을 위축시키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조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문화적 폭력, 그 가운데서도 유가족다움은 그간 중요한 사회 의제나 학문 주제로 부각되지 못해왔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재난 피해자들에게 강요 되어온 유가족다움을 주요한 현상으로 접근하며, 피해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고찰하며, 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유가족다움에 접근한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6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위를 점하

고 있는 사건이자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다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2019년 5월에 열린 4·16재단 창립 1주년 안전사회포럼에 참여한 유가족과 4·16재단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보는 사회의 시선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할 만큼 내부의 문제의식 또한 높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재난이자 국가폭력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특수성 역시 고려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참사’라는 공식적 호명이 붙은 첫 재난이기도 하다.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2016년도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무력화되면서 진상규명과 정의실현이 어려워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피해가 증폭되던 시기였다. 이렇듯 ‘사회’가 붕괴되던 시기에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정과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이라는 사회적인 방식의 해결책이 재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세월호 참사를 통한 유가족다움에 대한 연구는 사회가 부재한 시대에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 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 또한 갖는다.

관련해 많은 연구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반응들, 특히 유가족다움의 생산, 확장에 영향을 미친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시선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왔다. 강태수와 신진욱(2019)은 이를 크게 사회구조, 담론, 이념, 체험의 영향으로 구분한다. 먼저 사회구조적 설명은 압축적 근대화, 성장 패러다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등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의 배경으로 제시한다(박소진 2018; 장덕진 외 2015).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 변동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경쟁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해체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 하거나 사회적 혐오를 생산, 확산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 담론과 언론보도 프레임의 파급력이다. 보수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사고-보상’ 담론, 피로감 담론, 일탈적 피해자 담론 등이 형성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유가족다움을 강화하는 여론들이 만들어져왔다(김영욱·함승경 2015; 김영욱·함승경·김영지 2017; 김태원·정정주 2016; 유경한 2019; 이선민·이상길 2015; 이완수·배재영 2015; 홍주현·나은경 2015).

셋째, 정치적,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시민사회의 특징도 중요한 배경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전략이기도 했는데, 양극화된 이념이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정치쟁점화 및 진상규명 과정에서 증폭되어 피해자에 대한 혐오 양산에 영향을 미쳤다(김정한 2014; 정효정 외 2016).

넷째,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미친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개개인들의 생애맥락적 차원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 배경의 중요성을 반응의 주요 원인으로 강조한다(강태수·신진욱 2019; 한효정 2017).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전되지 못했다. 학부모 유가족의 진상규명 활동과 의미를 개괄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로 유가족다움을 검토하거나(김아람 2019; 신명진 2016), 정상가족 신화의 측면에서 유민아빠 사례를 간략히 분석하거나(이현정 2015), 혐오발화와 증오행동의 사례로 다루는 논의(권명아 2015)가 있었을 뿐이다. 본고는 유가족다움을 전면화해 고찰한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유가족다움의 피해자로 위치지어왔던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사회적 억압과 통제 속에서 이들이 발휘했던 주체성과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에 어떻게 유가족다움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왔는가?’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들이 유가족다움

에 순응, 협상, 저항하는 사회적 과정 혹은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회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과 이론적 논의

### 1) 연구방법

세월호 유가족들의 유가족다움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활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면접은 기존의 문헌이나 양적 연구를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내적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가족다움을 고찰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경험한 당사자의 감정과 사유,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고유하며 타자로 대체되거나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각 개인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실체와 본질, 그로 인한 존엄의 훼손과 피해, 진동과 역동에 접근할 수 없다(유해정 2020b, 136). 이때 심층면접은 외화된 특정 행동과 재현, 그리고 문서자료 이면의 내적 세계와 소통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심층면접은 연구의 형식을 빌려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한국 사회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상기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참사 자체의 규명과 함께 참사 이후에 발생한 2차 가해들의 진상을 파악하며 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되어야 할 일은 당사자의 이야기, 즉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사자의 목소리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어떤 위치와 조건에 놓여 있는지, 사회가 가한 폭력은 무엇인지를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이에 기반한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심층면접은 피면접자, 즉 연구 참여자의 자기표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회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건의 주체이자, 인권의 주체로서 당사자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유해정 2020a, 이재승 2016). 그리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월호 유가족이 경험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강조는 현존하는 현상에 대한 환기이자 세월호 참사 해결의 강력한 유인이지만 유가족다움을 재생산하고 고착화 한다는 점에서 부작용과 한계 역시 명확하다. 따라서 유가족다움의 “부정의로부터 탈출하는 방식, 부정의한 사회에서 생존하는 방식, 부정의에 대항하는 방식”(콜린스 2009, 34)에서 이들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이때 심층면접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는 이들을 새롭게 위치짓고 조망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단원고 희생학생의 엄마 5명을 심층면접했다. 이들 중 2명은 4·16가족협의회 간부로 활동을 중이며, 3인은 회원으로 직·간접적인 활동에 참여해왔다. 심층면접으로 연구에 함께해준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4~50대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월호 참사 이전에 사회생활을 꾸준히 했던 경험이 있다. 또한 희생자녀 이외에 슬하에 또 다른 자녀가 있으며, 현재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참고로 연구자는 4·16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와 관련한 기록과 연구,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하며 4·16가족협의회는 물론 연구 참여자들과 두터운 유대를 형성해왔다.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4·16가족협의회 직책	인터뷰 일시	인터뷰 소요 시간
A씨	간부	2020년 3월 27일	2시간 30분
B씨	회원	2020년 3월 30일	4시간
C씨	회원	2020년 4월 11일	3시간 30분
D씨	간부	2020년 3월 11일	2시간 30분
E씨	회원	2020년 3월 6일	5시간 50분

## 2) 이론적 논의: 사회적 낙인

세월호 유가족이 경험하는 유가족다움은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학문적 차원에서 낙인 이론을 정립한 고프먼(2018)은 “대단히 나쁘거나, 위험하며, 나약한”을 의미하는 속성의 불명예가 인격체에 달라붙어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낙인으로 정의한다(고프먼 2018, 15). Crocker와 동료들(1998)은 낙인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평가 절하된 사회적 정체성을 매개하는 어떤 속성 또는 특성”이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Crocker et al 1998, 505). 또한 낙인은 어떤 개인 혹은 집단에 부정적 속성의 꼬리표(labeling)가 붙여져 오래기간 저평가되면서 이것이 고정관념화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이인옥·이은옥 2006). 이러한 정의들은 낙인찍힌 사람들이 일정한 부정적 속성이나 특성, 혹은 양태를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공유한다.

Link와 Phelan(2001)은 보다 분명한 어조로 낙인이 권력 작용의 결과

라고 주장한다. 낙인은 개인적 수준의 문제가 아닌 낙인의 요소가 될 차이를 선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힘에 의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Link와 Phelan(2001)은 △문제가 될 차이를 식별해 라벨을 붙이는 라벨링, △고정관념을 통해 차이를 부정적 속성과 연관시키는 정형화, △부정적으로 라벨링된 그들과 우리의 분리, △사회적인 평가절하와 거부, 배제를 근거로 발생하는 지위 상실,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차별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가 낙인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회 문제로 선택되는 “차이와 정체성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그 자체로 권력과 헤게모니적 규범, 그리고 특정담론들의 산물”(브라운 2010, 79)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표준화와 경계 짓기,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안된 폭력의 일환이 낙인이라는 것이다.

낙인이 속성 자체보다는 관계적이며 사회적 맥락에서 작동한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사회 및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낙인찍힌 사람은 낙인에 의한 사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Major와 O'Brien(2015)은 낙인이 △부정적 대우와 직접적 차별 △예상 확증과정(expectancy confirmation processes) △고정관념의 자동활성화(automatic stereotype activation) △정체성의 위협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혹은 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구분과 차별, 기회의 박탈과 배제, 지위의 하락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동반하며, 어떤 식으로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정체성의 훼손은 낙인의 가장 핵심적인 폐해로 이는 필연적으로 자아 및 타자와의 관계손상을 동반한다. 자아와의 관계 손상이 자기비하, 자기혐오, 의구심, 우울, 적개심, 불안, 위축, 단절 등으로 나타난다면 타인과의 관계 손상은 회피, 단절, 고립, 배제 속에서 차별, 구분, 혐오, 나아가 물리적 공격 등의 형태로 외화 되곤 한다. 또한 이것이 반복, 악화되

는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결국 낙인은 관계에 대한 내·외 부적 단속과 차별을 통해 삶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훼손하며 인간 존엄과 평등한 공동체에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낙인찍힌 사람은 사회적 낙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첫째, 다수의 사람들은 낙인의 근거로 지목된 속성, 언어, 행동, 상황 등의 교정을 시도한다. 의료적 치료, 반복수행, 전환(conversion), 심리적·물리적·관계적 단절 등을 통해 오명 상태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고프먼 2018; 박송이 2018; 울포트 2020; 이현숙·유해숙 2015; Major & O'Brien 2005). 이는 낙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내면화한 결과로 부정적인 차별에 자신을 귀속시키거나, 정체성 훼손을 우회해 극복하려 하거나, 낙인찍힌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외화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Major & O'Brien 2005).

둘째, 패싱(passing)과 커버링(covering)을 통해 자신이 그 집단에 수용되지 않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낙인 회피를 시도한다. 패싱이 낙인 집단에 소속된 걸 회피, 부인하는 태도, 문화라면, 커버링은 ‘티내지 않기’ 혹은 다른 측면의 탁월함, 가시화를 내세움으로써 낙인의 영향을 축소하거나 최소화 하는 태도, 문화라 할 수 있다(요시노 2017). 자신의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전략이자,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가치에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됨을 통해 낙인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셋째, 낙인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수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 인식을 가진 타자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거나(이현숙·유해숙 2015), 낙인을 통해 부각된 특성을 활용해 부차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결점 혹은 편견을 자원화하거나 상업화하는 것이다(고프먼 2018). 이는 낙인이 왜곡되고 제한된 정보, 혹은 고정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가능한 수준에서 인정하고, 또한 필요시 이를 삶의 자원

으로 활용하는 태도다.

넷째,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낙인에 저항한다. 현실에 대한 무시, 관념을 거부하는 해석, 저항적 직접행동 등을 통해 낙인의 해체를 시도한다(고프먼 2018). 이는 낙인찍힌 그룹에 대한 일체감을 높이고 내부 소속감을 향상시킴으로써(울포트 2020; Major & O'Brien 2005), 낙인의 부당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대항함으로써(클레어 2020), 주변의 지지 세력을 형성, 규합함으로써(이현숙·유해숙 2015)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공격하는 상대를 역비난하며 돌파구를 만들기도 한다(공미혜·이수연 2013). 낙인에 대한 저항은 매우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Major & O'Brien 2005), 높은 자아존중감은 저항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다(강성혁 외 2015). 또한 저항은 개인적 수준을 넘어 대인관계적, 조직 및 제도적, 지역사회적, 정부 및 구조적 차원의 긍정적 개입이 이뤄질 때 향상되기도 한다(Heijnders & Van der Meij 2006). Heijnders와 Van der Meij(2006)은 낙인을 경감,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전략을 제시한바 있는데, 이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자조 및 옹호집단, 권한강화(empowerment), 집단상담 등의 활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존중을 향상하고 지식, 태도, 행동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변화를 꾀한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교육, 접촉, 옹호, 저항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낙인에 대한 비판적 지식을 함양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개발해 낙인 때문에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사회적 낙인으로의 유가족다움

#### 1) 변화된 유가족의 일상세계

어린 자녀와 사별한 유가족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일상, 새로운 삶의 세계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음식냄새가 나지 않는 집, 대화가 사라진 가족, 소원해진 친인척, 의미 없는 명절과 기념일,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는 하루, 삶과 일의 의미를 상실한 삶, 살아있음에 대한 구차스러움, 끊임없이 상상되어지는 자녀의 마지막…. 하지만 또한 살아있기에 먹고 사는 일, 챙겨야 할 자녀, 살펴야 할 부모,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죽음, 매해 돌아오는 아이의 생일, 문득 스미는 웃음과 행복에 침투하는 죄책감 등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애도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죽음 이후 지난 6년 넘게 유가족들이 마주해온 시간은 그동안 살아왔으며, 축적해왔던 삶의 ‘문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누군가 새로운 삶의 문법을 제시해주지도 않는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일상과 삶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했듯, 아이를 잃고 ‘사회적 상(喪)’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상의 파괴와 일상의 재건을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비일상적이며 비동시대적인 세계에 유가족들은 내던져져 있다.

본인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혼동되는 삶의 조건에서 전국을 들쭉이게 한 사건의 유가족으로 이웃과 공존하며 일상을 살아낸다는 건 참사초기부터 몇 가지 층위에서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첫째,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과 마주해야 했다. 참담함에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지만 또한 때론 호기심 어린 눈빛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생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 눈이 너무 무거워서” 그 눈빛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 지 몰랐다고 말했다.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도 불편하

고, 성당이나 교회에 가는 것도 주춤거렸으며, 일부러 먼 마트를 이용해 장을 봤다. 출퇴근 시간에는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옆집에서 문소리가 나면 신발장 앞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엘리베이터 층이라도 같으면 피해서 타고 내렸다. 참사로 아이를 잃었던 “자녀를 못지킨”, “부덕한” 부모 같기도 했고, 따라죽지도 못한 죄책감에 부끄럽기도 했다. 졸지에 비참에 잠긴 가족으로 전락한 삶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상이 모두 아는 사건의 유가족이 됨으로서 전혀 다른 관계적 위치에 놓이게 됐고, 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긴장, 두려움, 갈등을 발생시켰다.

둘째,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참사 이후 거의 모든 사적 관계, 모임과 소원해지고 결별하는 경험을 해왔다. 이 상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웃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관계를 맺어왔던 지인, 동료들과의 관계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생겼다. ‘이방인’이 된 것이다.

“(연구자 주. 참사 직후 이사해서) 한 아파트에서 5년을 살았어요. 저희 வீ집 애기 엄마가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온 이상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00 얘기랑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힘들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앞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거나 내가 가까이 가도 쉬운 인간관계는 안 되겠구나. 마음이 너무 속상했죠. 그런 것들은 일상사고요, 지금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C 씨)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행동하는 걸 선호한다. 이 결합의 이유는 대부분 편안함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조건이 뒤섞이면 다소 어색함, 불편함이 뒤따르기

쉬운데, 이는 타자에 대한 특별한 편견 보다는 익숙한 부류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울포트 2020). 이는 자녀를 상실한 유가족이란 신분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의 근본적 어려움을 보여준다. 타자들 역시 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며, 응답해야할지 알지 못한다. 특히 현대에 들어 우리의 일상은 상실 및 죽음과 매우 먼 거리를 유지하며 구축되어왔기에 이런 만남과 대화에 취약하다. 추모시설이 산자들의 경계 밖,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것 역시 같은 이치다. 참사 직후부터 가족들은 자신에게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지울 수 없는 “인장”이 새겨졌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인장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으며, 내 노력 여부에 존폐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었다.

## 2) 유가족다움의 생성과 확장

유가족 인장, 즉 꼬리표(label)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을 둔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낙인으로 변화하게 된다. 유가족과 유가족다움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 유가족이 관계적이며 상황적인 개념이라면, 유가족다움은 한 존재를 고인 혹은 고인의 상실에 따른 고통에만 정박해 이에 맞는 이미지와 역할을 요구한다(정희진 2018). 일정한 감정, 태도, 행동 등을 전제하며 이것이 그 존재의 인격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간주해 이의 충족을 강요한다. 존재의 고유성은 훼손된 채 고정화되고 정형화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요구된 유가족다움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비극적 사건을 경험한 슬픔과 고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존재와 증언은 사건의 실체와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전제됨에 따라 피해자의 무고함, 순수성,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는 다른 피해자 운동에서도 찾아지는 특징으로, 특히 피해

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세월호를 ‘사고’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사건’으로 밀어 올리려 했던 사람들 간의 치열한 정치적 격돌 속에서 양쪽 진영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월호 가족들에게 순수한 피해자의 전형을 기대했다. 이는 유가족들의 일상적인 감정, 태도, 행동을 억압하며 다양한 삶의 가능성, 자율성을 훼손해왔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를 ‘일상적 유가족다움’이라 명명한다.

둘째, 세월호 참사를 사고로 만들려했던 사람들은 유가족다움을 통해 익명화, 순종화, 고립화를 획책하고자 했다. 즉 세월호 참사를 특별한 문제로 주장하지 말 것, 직접행동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정하지 말고 권력의 처리를 기다릴 것, 일상생활로 복귀해 비탄에 빠진 존재로서 침묵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해왔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의 유가족다움을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이라 명명한다.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은 세월호 참사를 사고로 만들어 사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화 하려는 전략이다. 사건이 사고로 개인화되었을 때 문제는 몇몇 문제 있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존엄과 삶의 의지에 큰 충격을 경험하지만 권력은 무사하다. 오히려 유지되고 강화된다. 반면 사건이 사회화되었을 때 권력은 도전받게 된다. 변화와 교정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엄밀하지 않으며 임시방편적이다. 또한 서로의 관련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특히 일상적 유가족다움은 주체를 암묵적으로 규범에 종속시키는 권력의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의 토대이자 산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면서 사회와 유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가족들의 대응 역시 달랐기 때문이다.

이 두 측면의 유가족다움은 참사 발생 100일을 전후해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전 사회적 애도 분위가 반감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때다. 해경 해체, 유병언 몰이와 사체 발견, 두 번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의 승리 등의 국면 속에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보수 언론은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세월호 참사를 지목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라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보상금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책략이라는 흑색선전이 유포됐다(유해정 2018).

김영욱·함승경(2015)의 연구는 당시의 담론이 시기별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구조 수습기(2014년 4월 16일-5월 19일)에는 ‘참사’ 담론 대 ‘사고’ 담론이, 원인·책임 규명기(2014년 5월 20-7월 22일)에는 ‘진상규명’ 담론 대 ‘보상’ 담론이, 대책 수습기(14년 7월 23일-11월 18일)에는 ‘기억’ 담론 대 ‘피로감’ 담론이 공방을 벌이며 경쟁했다. 참사 직후에는 ‘참사’ 담론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례입학, 보상, 피로감, 과실책임주의 등의 담론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변화에는 몇 가지 정치적이고 상황적 요인이 작동했다.

첫째, 참사가 정치적인 위협으로 부상하자 청와대는 ‘순수’ 가족 프레임 제기했다.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의 분리를 시도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에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9월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는 검찰의 엄정하고 기민한 대처를 주문하는 등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유가족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흠집 내기와 균열을 시도했다.

둘째, 보수언론 역시 세월호 피해자의 층위를 구성해 차별화하는 보도전략을 구사했다(이선민·이상길 2015; 홍주현·나은경 2015). 홍주현과 나은경(2015)에 따르면 보수종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일반인 가족들을 합법적 지각하는 피해자로 묘사했다면, 단원고 가족들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합법적 행위 수준이 낮은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해 ‘일탈적 행동을 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관련해 단원고 유가족 보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 것, 충돌, 진보, 좌파, 민주노총, 특례, 입학, 경찰, 폭행, 혐의, 폭력행위, 대리운전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됐다. 강력하고 상징적인 미디어의 이야기 구조는 유가족다움의 낙인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론을 급반전시키고, 유가족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노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찬성여론이 58.3%,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찬성 여론이 65.8%였던 것이<sup>3)</sup> 사건 이후 42.8%대로 떨어지는 등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급반전했다.<sup>4)</sup>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여당과 보수 세력이 맹공을 퍼부었다(유해정 2018). 적극적인 담론의 유포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가 시민들의 권리를 압도하는 특혜에 해당한다는 착시효과를 유발했다.

이러한 담론들은 참사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의 책임을 축소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을 부추겼다. 참사와 피해자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으나 참사의 의미와 책임을 회피, 축소, 전환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다른 범주에 넣어 재배치하는 해석적 부인(interpretive denial)과 함축적 부인(implicatory denial)이 시도된 것이다.

유민 아빠를 둘러싼 유가족다움 논쟁까지 만해도 유가족들은 이를 특정 정치세력 혹은 혐오세력의 책동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유가족들은 도덕성과 진정성에 치명상을 입었

3) 『KBS』 . “세월호법 다시 협상·수사권 보장.” 2014. 8. 31.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2921926> (검색일: 2020. 8. 4)

4) 『중앙일보』 . “수사·기소권 부여 찬성 42.8% vs 반대 42.9%.” 20014. 9. 22.

<https://news.joins.com/article/15887157>(검색일: 2020. 8. 4)

다. 같이 울어준 이웃, 동료들조차 그만 우려먹으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사회가 거대한 눈초리들의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가까운 관계로부터 체감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연구자 주- 회사에 다시) 나오냐? 나는 너희 아이를 위해서 한 달을 슬퍼해줬다. 울어줬다. 고만해라. 니 자식 잃은 거는 슬프지만 너는 그만큼 보상을 받지 않냐? 내가 먹은 거, 옷 입는 거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따지게 되고, 일하는 것도 자기들 피해 본 다 생각을 하고... (E 씨)

외부적으로 반감과 냉소가 증폭되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민심이 변화하자 연구 참여자들은 유가족다움에 대해 처음으로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진상규명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역시 인식하게 된다.

저는 아줌마로 살아서 그런지 그런 일(연구자 주-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영향력을 사실은 많이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세월호로 이렇게 해 보니까 내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엄마의 옷이, 화장이, 웃음이, 눈물이 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회적 파장을 발휘하다보니까 세월호 가족 한 사람이 잘못하면 세월호 전체가 다 욕먹고 내 새끼를 비롯해서 304명의 희생자가 다 욕을 먹는구나. 아 그래서 유가족다움을 강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B 씨)

## 4. 유가족다움에 대한 대응 전략

### 1) 내면화, 단속, 검열

변화된 국면과 담론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유가족다움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우선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은 애초부터 타협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진상규명은 부모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야 할 죽은 자녀와의 약속”이자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 유가족다움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적 유가족다움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식, 수용, 협상하며 저항해왔는데, 주목할 것은 각 대응이 단선적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유가족다움을 내면화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유가족다움의 틀에 맞춰 자신을 검열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엄마들은 옷차림, 화장, 언행(웃음과 말) 등에 대한 단속이 많았다면 아빠들에겐 술자리, 운전습관, 취미 등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자녀들에겐 노래방, 술집 등의 방문이나 단체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이 요구됐다. 보상금 논란에 낚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교체하거나 승용차를 바꾸는 것도 이웃의 눈치를 살폈다. 유가족다움에 대한 요구가 부당하다 느꼈음에도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은 사회적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비난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자신이 아닌 희생자, 즉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처럼 진상규명운동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염려 또한 크게 작동했다.

내가 꽃을 사러갔는데, 00야! 생일 축하해 넣어달라니까, 어 이상하다, 전에도 똑같은 문구로 누가 사가던데. 근데 그 사람이 세월호 유가족인데, 벤츠를 끌고 다니고...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은 돈 많나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얼어버렸잖아, 거

기서. (E 씨)

큰애가 참사 후 군대에 갔어요. 그 (연구자 주- 팽목항에서 시신들 수습되어 올라온) 상황을 다 봤는데... 심리치료도 못 받고 갓잖아요. 근데 항상 걱정되는 게 아이 신변이 걱정 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감정을 억제 못해서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우리 전체가 욕을 먹으니까. 사실 난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예요. 행동 똑바로 해라, 사고 치지 마라, 계속 그 애길 하거든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 우리 사이에 분란 일으키고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고를 쳤다, 또 이슈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무 미안하죠. (D 씨)

유가족다움은 외부에서 가족들을 향한 통제와 억압이었지만 내부가 내부를 단속하는 이중적 효과를 발휘해 유가족들 안에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노란 옷을 안 입으면 꼭 벌거벗은 느낌이 들게끔 얘기하는” 가족들의 힐난, “00이 엄마는 왜 그래?” 하는 말이 들릴 때마다 어떤 엄마들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수치심은 어떤 속성의 결핍되었거나 오염된 속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기대하는 자신과 인식되는 자아간의 괴리가 발생할 때 드는 감정으로, 사회적 고정관념을 수용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기도 하다(고프먼 2018). 또한 이는 다른 유가족의 수군거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당당함을 유지하려 했던 엄마에 대한 선망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좇대 없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질타하는 양가적 감정을 파생시키기도 했다.

## 2) 고립, 커버링, 패싱

유가족다움에 대응하는 두 번째 전략은 회피다. 이는 고립, 커버링,

패싱의 세 측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맺기를 거의 시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참사 초기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 안쓰러움과 호기심의 눈빛, 이질감 때문이었다면 이후의 어려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세간의 혐오, 조롱, 비난에 대한 공포였다. 기존 관계는 물론 새롭게 관계 맺는 이웃, 관계들이 세월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유가족다움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 관계 맺기에 가장 중요했다. 낙인찍힌 사람들은 관계 맺기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활동반경을 조정하고 그 결과 더욱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서도 이런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로운 사람들을 안 만들려고 해요. 이웃하고 말 안 해. 근데 그 곱을 그냥 편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월호만 이렇게 하니깐 편해. 아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사회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월호에 갇힌 사람처럼 살아남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왜 아직도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난 내가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에 갇혔나 봐. 우리 아이처럼 못 나왔나봐. (B 씨)

한명의 연구 참여자는 이를 “유가족은 세포가 다르다”는 말로 표현했다. 반감을 넘어 적대를 드러내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진상규명 운동을 해오다보니 사람들의 말 뒤에 숨은 저의를 의심하거나, 무의식중에 미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관계에서 쉽게 위축된다는 의미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한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일상적 관계에서 동일한 경험을 해오고 있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비가시적이라 자신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모른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득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세월호 유가족임을 패싱하거나 커버링 하는 방법을 통해 낙인을 관리해오고 있다. 패싱이 유가족임을 드러내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에 가깝다면 커버링은 유가족임을 사람들이 알지만 스스로 유가족인체 하지 않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제가 공부를 한다고 00에 다니면서 강의 듣고 다니는데, 1년 동안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던 엄청 친한 언니들이, 야 저기 화랑 유원지 들어온데. 어이 재수 없어, 그 죽은 애들 왜 데리고 와, 그러는데 눈물이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언니, 언니 하고 다녔는데, 내가 세월호 (연구자 주- 유가족)인지 몰랐던 거지. 세월호 납골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거기에 우리 ☆☆☆가 올 거라는 말을 못한 거지. 집에 와서 평평 울었어요. (중략) 그 다음날 봤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고 피하는 거야. 다음 학기 등록을 안했어요. (E 씨)

사회가 유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패싱보다는 커버링으로 보인다. 참사 전후 동일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희생자들의 아버지의 경우 다수가 커버링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말했다.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 유가족이 불확실한 위험의 상징, 공동체의 부정의를 표상하는 존재가 아닌, 문제가 없는 내부자처럼, 체제 순응적으로, 일상에서도 부담스럽거나 튀지 않게 행동하길 요구받는다는 것이다. “유난떨지 말라”, “나대지 말라”는 주문으로 적절한 커버링이 가능할 때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정의의 문제를 관용의 문제로 대체시켜버린다. 사회적 고통을 개인 감수성의 문제로 환원한다(브라운 2010).

또한 주목할 점은 패싱과 커버링 모두 사회적 정체성의 자기부정, 가족에 대한 죄책감, 비난받을까 두려움 등 낙인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울감의 상승과 자존감의 하락 역시 동반적이다. 이웃, 지자체, 중앙정부 등 공동체와 갈등 경험이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질환 발병률이 5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이나빈 외 2020).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10명중 6명은 사회적 지지가 매우 빈약하고, 3명 중 1명은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훈 2018). 사회와의 대립, 공감에 대한 기대단절, 거주지역 및 공동체와의 갈등 등이 주된 이유로(박지영 2018), 이는 세월호 유가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갈등과 고립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 3) 사회적 자원화

유가족들은 유가족다움의 전형성을 “무기삼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사회적 낙인을 수용하며 전유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유가족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회적 자원화 하는 전술이다. 상복, 영정은 고통스런 유가족의 전형이었으며, 삭발, 단식, 삼보일배, 도보행진 등은 재난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절박함을 재현하는 보편화된 시위방식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6년간 가혹한 육체적 고행을 통해 고통의 참담함을 극대화하는 시위를 벌이면 진상규명의 진정성과 절박함을 호소해왔다(유해정 2018). 이중 유가족다움이 가장 전면화된 시위는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상복 차림으로 영정사진을 든 채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한 2015년 4월의 시위다. 당시 유가족들이 삭발과 상복, 영정까지 동원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시

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해수부가 갑자기 배·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시행령의 문제점이 아닌 배·보상만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한 것에 대한 분노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시위방식에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상복을 입었던 거는 누구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304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나는 찬성을 했고 영정사진을 드는 거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짜증이 났어. 그런 시위들이 세월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잣대 맞춰 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복에 세월호 유가족이 어디서 웃었다, 도넛을 먹었다, 피해자답지 못하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은 거예요. 피해자는 고개 숙이고 울고 있고, 앉아도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죄인이라는 거고. 내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기 사진을 갖고 나가 있는 거야. 왜?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야. 세월호는 알리는 길이고. 어? 그래요? 그러면 알려야지. 내가 내 새끼 죽은 거 알려져 밝혀야지. (B 씨)

연구 참여자들은 유가족다움을 사회적 자원화하는 것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인정하면서도 다시 자녀의 상을 재현하는 것에 따른 고통과 함께 사회가 강요하는 유가족다움을 유가족들이 재생산함으로써 스스로 포획되고 있다는 점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재난의 아비규환 속에서 통곡하는 유가족, 상복과 영정으로 대표되는 고통의 재현은 방관자들을 목격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무고하고 수동적인 희생자로서의 이들의 재현은 유가족다움을 고착, 재생산 하는 효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고통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으나 권리의 주

책로서는 요구할 수 없는 처분적 위치에 이들을 정박시키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 유가족다움을 자원화하는 행위의 난제가 존재한다.

#### 4) 저항과 해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유가족다움에 저항하고 이의 해체 또한 시도해왔다. 한 연구 참여자는 직업란에 ‘세월호 엄마’로 적었다는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변화, 저항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모순에 대한 통찰이다.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은 자아를 구성하는 정체성과 자아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강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백상현 2017). 자녀의 상실을 통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선 이들에게 지난 6년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또한 사회의 모순을 통렬히 통찰함으로써 성장이 거듭된 시간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상상하던 공동체의 정의와 사회를 지배하는 정의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사회가 말하는 진상과 유가족들이 찾고자 하는 진실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유가족다움이 낡은 사회를 보존하고 작동시키는 또 다른 지배도구임을 깨닫게 된다. 애초부터 유가족다움을 규정한 것은 유가족이 아니었다. 관료, 정치인, 언론, 의사 등 재난으로 상실을 경험해 본 적 없는 권력이 유가족다움을 정의하고 주장하며 보증해왔다. 이는 유가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보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과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 과정에서 생성, 확산되어온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가해자는 아니라는 거지. 나는 너한테 잘못 한 게 없어.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을 슬프게 한 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당당하지 못 해야 돼? (B 씨)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유가족다움에 간헐했을 때 온전한 삶이 불가능 함 역시 인식하게 된다. 모순에 대한 자각은 두 방향으로 확장된다. 하나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책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나로서 설 때만이 제대로 된 삶이 가능하다는 확신이다.

유가족이라는 게 지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내가 유가족이라고 꼭 주눅이 들어야하나? 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때도 00이가 생각이 나고요, 슬플 일 있을 때도 00이가 생각이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드러내야지. 나는 나예요, 나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긴 싫어요. 내가 없고서 어떻게 다른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없고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서야죠. (C 씨)

경험을 통해 모순을 깨달은 유가족들은 “그들의 통치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할 수 없다고 선언”(클레어 2020, 192)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가 누구이고, 왜 유가족이 되었으며, 어떻게 존재 하길 원하는지를 정의하는 중심에 유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둘째, 희생된 자녀의 존재다. 사회는 산자들의 세계로 생각되곤 하지만, 죽은 자들 역시 이 사회 안에 자리를 갖고 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의례적 관계가 지속된다는 건 죽은 사람이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임을 의미한다(김현경, 2015). 관련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전히 “00이 엄마”로 호명되길 원했다. 자신의 이름 앞에 자녀의 이름을 놓음으로써 사회에서 자녀의 소멸을 방지하고 아이와 사회를 때

개하려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름의 상실은 자아의 심각한 축소를 가져온다(고프먼 2018).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처럼 사용할 때 도래한 건 자신의 이름의 상실, 즉 자아의 축소였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연구 참여자들은 또 다른 자아의 구축과 확장을 경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녀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아남아야 할 책무를 갖게 되었으며, 부정의한 세계에 저항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용기는 외적 강제에 항거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보존과 자기긍정의 능력이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을 거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을 통해 가능하다(김상봉 2015). 따라서 “00이 엄마답게”는 모든 연구 참여자의 삶, 지향, 관계,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동력이었고, “엄마 아주 잘 살았어.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라는 소리를 듣고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됐다. 이 안에서 유가족들은 “자녀를 품은” 존재로서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정의하고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가 항상 엄마 예쁘고 당당한 모습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싸움할 때는 운동화 신고 투쟁복 입고 나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그때는 공식성을 띠고 저는 △△이 엄마로 세월호 이름 앞에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나도 당당해지고 싶고 누구보다 △△이도 그걸 바랄 테고. (D 씨)

00이가 내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 했어요. 책도 사서 선물해 주면서 거기에다가 ‘◇◇대학교 □□□에게 준다’고 써주고. 감사 나고 제가 공부는 못했던 거죠. 솔직히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친한 동기들이 00이와 작은 애를 위해서라도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보다 빨리 졸업했어요. (A 씨)

셋째, 애도하는 시민의 존재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참사 이전에 자신과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시민이 진도와 팽목항에서 함께 울어준 자원봉사자들이었다면, 그 다음 만난 시민은 진상규명 운동에 함께 하는 이들이었다. 특히 6년의 시간동안 진상규명의 곁을 지킨 시민들은 유가족들을 '위해' 연대하는 자를 넘어 '따라 체험'을 통해 유가족의 고통을 공유하고, 부당한 권력에 속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목도한 공동체의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가 부재한 곳에서 스스로 사회가 되기를 자처한 존재들이었다(김상봉 2015, 유해정 2018). 또한 이 시민들은 먼저 재난참사와 국가폭력을 경험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기도 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유가족다움의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의 유가족이자 피해자로서 나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시민의 존재는 유가족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증언자의 자리로 이동시켜왔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라면 증언자는 사회의 부정을 먼저 목도하고 경험함으로써 사회의 균열과 공동체의 붕괴를 알리는 자이다.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모두에게 닥칠 위험을 먼저 깨닫고 경고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유가족다움의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조건에서 다시 사회에 뿌릴 내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언젠가 내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립 스틱이라도 좀 발라, 아픈 사람 같잖아. 매일 왜 그러고 다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족들이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생각부터 유가족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 말 듣고 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A 씨)

넷째, 4·16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의 구심으로써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에 대한 대항 담론을 형성하고 저항의 힘을 규합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과 맥락을 제공해왔다. 즉 법적, 정치적 진상을 넘어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용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진상규명이 단순한 인적 청산이 아닌 구조와 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임을 독려하며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에 저항해온 것이다. 또한 동시에 4·16가족협의회 내의 공동체들, 4·16기억저장소, 4·16공방, 4·16합창단, 4·16노란리본극단 등은 일상적 유가족다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왔다. 4·16가족협의회가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에 저항하기 위해 일상적 유가족다움을 일편 수용해 서로를 질곡하기도 했다면 이 공간들은 좀 더 친밀하고 편한 사적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 장이었다. 이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드러내고 자신의 일상, 진동, 고충에 대해 말할 수 있었으며, 서로 말하고 듣기를 통해 자신의 진동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공통의 지평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공동체들은 가족 이외에 가장 안전한 일상의 공간이자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배후지였다. 이는 4·16가족협의회가 유가족다움에 대한 저항과 수용이 공존한 모순적 공

간이었음을 보여준다.

## 5. 인권에 기반을 둔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치유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침몰과 국가가 구조하지 않은 자녀의 죽음을 통해 공적 논쟁의 장에 진입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과정 속에서 유가족다움의 폭력을 경험해야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유가족다움은 문화적으로 구축되어온 고정관념과 편견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사고-보상의 재난정치에서 재난이 권력의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부인전략이자 통치전략이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사고로 만들려는 권력에 저항해 일상적 유가족다움은 수용하였지만 탈정치화된 유가족다움엔 타협 없는 거부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또한 한국 사회의 재난정치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사건으로 밀어 올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부정의와 모순에 대한 통렬한 통찰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관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일상적 유가족다움에도 저항해오고 있다. 하지만 저항을 통해 낙인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낙인의 부정적 영향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인은 “낙인 찍힌 자와 낙인 찍은 자의 상대적 힘의 균형”에 좌우되기 때문이다(Link & Phelan 2001, 378).

따라서 필요한 것은 주체의 용기와 함께 유가족다움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이것이 가능할 때 유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유가족다움에 대한 개인주의적 환원을 탈피하는 것이다. 사회적 낙인을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범주화와 그에 따른 집단화, 혹은 관습, 고정관념, 편견 등 사람들 사이의 자연발생적인 문제로 설명하는 접근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개인들 사이의 관용, 감수성을 강화하는 개인 환원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오랜 재난정치의 산물과 ‘지금-여기’에 작동하는 권력 작용의 결과로 접근하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삶의 자율성과 존엄이 훼손된 사회구조가 야기한 인권침해 문제로 인식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해법 역시 유가족의 권리회복을 통한 사회적 치유와 권력의 교정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

둘째, 법적, 정책적 차원의 개입이다. 이는 낙인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이때 중요한 것은 낙인 찍힌 자들의 권리에 기반해 낙인과 이것이 초래한 문제에 대항하는 것이다(Heijnders & Van der Meij 2006). 피해자들은 인권의 주체이자 또한 동시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권리의 주체이다. 하지만 이런 권리들이 존중되지 못할 때 피해자로서의 문제제기에 제동이 걸리며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해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적, 정책적 개입은 진상규명이다. 유가족들 역시 유가족다움의 사회적 해법으로 진상규명이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진상이 명확히 밝혀졌을 때 유가족들의 주장과 요구가 폐쓰기나 특권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재건해 이후의 삶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다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봐요, 그동안 해결된 게 없잖아요. 밝혀진 게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뭘 요구를 해. 진상규명해 달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 비쳐지

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가족처럼, 유가족답게 살 수밖에 없고, 외부 사람들이 당신은 유가족이니까 유가족답게 살아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면 정부에 국가에 그리고 부패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내가 정당하게 될 하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다녀도, 그래 우리 아이는 이렇게 희생됐어. 우리가 피해자야.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이걸 할 수 있어. 진실만 밝혀주면 다 필요 없다니깐요. 내가 조심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니깐요. (D 씨)

셋째, 지역사회의 변화다. 유가족의 정체성으로만, 유가족다움으로만 유가족의 삶이 구성된다고 믿는 사회는 빈곤한 사회다. 상의 과정은 사회적이나 삶의 회복은 개인의 영역이라 치부하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과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적 상의 완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다양한 정체성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로, 다양한 욕구로 상실을 애도하고 이후를 살아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회가 존재한다 할 수 있다. 삶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상실을 경험한 이들에게 과거로의 복귀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회복이란 참사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닌 앞으로의 삶의 가능성을 여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공동체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유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교육과 접촉을 통한 만남, 유가족다움이 야기하는 폐해에 대한 지식의 향상은 유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인 가해자 혹은 방관자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시도될 때, 존엄에 기반한 사회의 재건이 도모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사회적 치유가 시도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본 연구의 한계를 기록해두고자 한다. 사회적 낙인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주거, 교육, 취업, 경제적 조건, 삶의 질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관계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젠더적 요인과 사회적 낙인의 상관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으나 논의의 한계상 이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가 한정적이고, 이들 모두가 진상규명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본고가 다룬 유가족다움이 일부의 경험과 사유에 바탕을 둔 논의라는 점 역시 주지하는 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학문적 연대가 깊어져야 할 이유다.

(2020년 10월 13일 접수, 11월 6일 심사완료, 11월 20일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성혁·김우정·송윤주·김재민·남궁기·하규섭·조현상. 2015. “양극성 장애 환자의 낙인 저항에 대한 영향 요인.” 『신경정신의학』 54(3). 309-315.
- 고영훈. 2018.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실태조사.”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건강 및 생활실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7-33.
- 공미혜·이수연. 2013. “무자녀 기혼여성의 낙인 대응전략을 통한 정체성 재정립.” 『여성학논집』. 30(1). 129-159.
- 권명아. 2015. “사건 이후의 인문학.”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실천문학. 39-76.
- 강태수·신진욱. 2019. “세월호 ‘노란 리본’과 일베의 ‘폭식 투쟁’: 공감과 혐오의 전형성과 그 비전형적 생활세계.” 『문화와 사회』. 27(3). 183-238.
- 김상봉. 2015. 『철학의 헌정』. 도서출판 길.
- 김아람. 2019. “세월호 유가족이 된 희생자 부모의 활동과 그 의미.” 『구술사연구』. 19(1). 107-143.
- 김영옥·함승경. 2015.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 경쟁.” 『홍보학연구』. 19(4). 83-115.
- 김영옥·함승경·김영지. 2017.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83(3). 7-38.
- 김정한. 2014. “한국사회의 대중과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 『황해문화』. 85. 86-100.
- 김태원·정정주. 20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99-224.
- 김현경. 2016.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박소진. 2018. “세월호 참사를 통한 폭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사유.” 『문화와 사회』. 26(3). 147-185.
- 박송이. 2018.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경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18.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질적연구 결과 발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건강 및 생활실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34-45
- 백상현. 2017. 『속지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위고.
- 신명진. 2016. “세월호 유가족의 사별경험.”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한. 2019. “‘위험사회’의 위험소통방식 변화: 세월호 참사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4). 655-690.
- 유해정. 2020a. “재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20(2). 129-168.
- \_\_\_\_\_. 2020b. “사회적 말하기와 주체성의 발현.” 『시민과세계』. 36. 125-158.
- \_\_\_\_\_. 2018. “재난정치와 애도: 남영호,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의 마주함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나빈·이정현·유선영·심명영. 2020. “재난피해자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 스트레스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34(2). 19-36.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언론과 사회』. 23(4). 5-66.
- 이완수·배재영. 2015.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 『한국언론정보학보』. 71(3). 274-298.
- 이인옥·이은옥. 2006. “낙인(stigma)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13(1). 53-66.
- 이재승. 2016.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민주법학』, 60. 145-179.
- 이현숙·유해숙. 2015. “탈북 청소년의 낙인 현상과 대응.” 『민족연구』. 62. 179-201.
- 이현정. 2015. “인간성, 가족, 그리고 기억하는 행위에 관하여.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실천문학. 107-130.
- 장덕진 외. 2015.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한울 아카데미.
- 정효정·배정환·홍수린·박찬웅·송민. 2016. “정치적 이념에 따른 트위터 공간에서의 집단 간 의견차이 분석.” 『한국언론학보』. 60(2). 269-302.
- 정희진. 2018.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권김현영 엮음. 『피해와

-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22-236.
- 한효정. 2017. “대학생의 세월호 참사 추모활동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현·나은경. 2015.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한국언  
론학보』. 59(6). 69-106.
- 갈통, 요한. 강종일 외 역.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 고프먼, 어빙. 윤선길·정기현 역. 2018. 『스티그마』. 한신대학교 출판부.
- 브라운, 웬디. 이승철 역. 2010. 『관용』. 갈무리.
- 올포트, 고든. 석기용 역. 2020. 『편견』. 교양인.
- 요시노, 켄지. 김현경·한빛나 역. 2017. 『커버링』. 믿음사.
- 콜린스, 패트리샤 힐. 박미선·주혜연 역. 2009. 『흑인 페미니즘 사상』. 여성  
문화이론연구소
- 클레어, 일라이. 전해은·제이 역. 2020. 『망명과 자긍심: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현실문화.
- Crocker, J., Major, B. & Steele, C. 1998. Social stigma. in D.T Gilbert, S.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 McGraw-Hill. 2504 -  
2553.
- Heijnders, M., Van der Meij, S. 2006. “The fight against stigma: An overview of  
stigma-reduction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Psychology, Health & Medicine*.  
11(3). 353-363.
- Link, B. G.,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Major, B., O'Brien, L.T. 2005. “The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Stafford, M. C., Scott, R. R. 1986. “Stigma, deviance, and social control: some  
conceptual issues. In S.C. Ainslie, G. Becker & L.M. Coleman (eds.). *The  
Dilemma of Difference*. New York: Plenum.

---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stigma of 'befitting the bereaved' and strategies for the response;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the parents of the victims of Sewol Ferry Disaster from Danwon High School and the social healing

*Yu, hae jeong\**

The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ways of social healing fo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sponse by the bereaved of Sewol Ferry Disaster to the social stigma of 'befitting the bereaved', which constitutes a secondary violence.

With the occurrence of the Disaster, the bereaved families entered the realm of public controversy in order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truth.

However, the families were forced by the social power to have attitudes that are regarded as befitting the bereaved in routinized and de-politicized terms. To be specific, the social power forced the bereaved families to have certain types of emotions, attitudes and behavior, on the one hand. It oppressed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families using such tools as anonymization, adaptation and isolation, thereby degrading their autonomy and dignity, on the other hand.

Responding to this, the families of the victims refused to remain

---

\* Research Professor. Gyeongsangnam-do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Smart City & Community Innovation

de-politicized as a strategy to find the truth.

In order to fight against the routinized image of the bereaved, they took on a variety of strategies including censorship and regulation through internalization; social isolation, passing and covering; social resources strategy; and resistance and deconstruction.

Such factors as victimized children, the 4.16 Family Association, and meetings with condolences-offering citizens, as well as severe insight into power, served as major power to resist and deconstruct not only the routinized but also the de-politicized image of bereaved families.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branding of 'befitting the bereav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e the demand for attitudes that are regarded as befitting the bereaved as a product of power games. Secondly, it is needed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bereaved to truth revealing and damage recovery. And thirdly, a transition in social awareness is necessary towards the bereaved.

When these conditions are satisfied, the dignity of the bereaved, along with that of the victims, will be recovered, and social trust that has collapsed will be reconstructed, upon which the possibility of social healing will be opened and accordingly life will be recovered.

**Key word:** Sewol Ferry, disaster, social stigma, befitting the bereaved, social healing